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0호 | 2009년 6월 25일자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중훈 | www.nars.go.kr

한·미정상회의 ‘5자회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시사점

2009년 6월 13일 이명박대통령은 美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2009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정상회의 ‘5자회담’ 제안은 2차 북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의 실질적인 이행은 물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Six-Party Talks) 복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한미정상회의 합의한 ‘5자회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은 이번 ‘5자회담’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5자회담’의 향방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살펴본 후, 최근 한·미정상이 제기한 ‘5자회담’ 구상에 대하여 중국이 비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배경과 더불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결같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해법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중국의 ‘북핵’에 대한 기본입장

그동안 1차 북핵위기(1993.3~1994.10)와 2차 북핵위기(2002.10~현재) 해결과정에서 드

러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는 ① 한반도 비핵화, ②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 ③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이 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그동안 고수해 온 외교정책상의 ‘불간섭’ 원칙을 북핵문제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참여는 자제하는 방침을 선택했다. 그러나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6자회담(남북한, 미, 일, 중, 러)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개혁개방이후 증강된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책임지는 대국(responsible great power)’ 전략의 일환이자,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증대를 위한 외교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차례(2006.10.9; 2009.5.25)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장(場)으로서 6자회담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북

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목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자 한다.

2. ‘5자회담’ 구상과 중국의 입장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한·미정상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5자회담’의 추진을 구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에는 반대하고 있고,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6월 16일 폐막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등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6월 1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천명했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한미정상이 제의한 ‘5자회담’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의 의장국 지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록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완

벽하게 제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또한 6자회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라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둘째, ‘5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5자회담’이 대북 제재를 위한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대외정책에서 인접국인 북한이 차지하는 정치·군사적인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북 ‘포용’ 정책의 완전 포기나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6자회담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5자회담’을 한미양국의 동맹 관계 강화의 결과물로 보고, 이러한 미국의 한·미 양자(Bilateral)동맹 외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다자간(Multilateral)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향후 6자회담을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미국주도의 양자동맹 외교

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인데, 만약 ‘5자회담’이 북한을 자극하여 비핵화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즉 북한의 핵보유라는 결과로 나타날 때 이는 타이완(臺灣)과 일본 및 한국의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6자회담은 북-미간 양자협상이 상호간의 신뢰부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관련국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은 9·11 사건 이후 미국과의 국제 반테러리즘을 계기로 형성된 대미 협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6자회담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3. 시사점

최근 한미 정상이 제기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구상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의 한미동맹의 강화 및 ‘5자회담’ 구상이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는 포위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양국간의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중요성 만큼이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의 중요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이명박정부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정책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평가한 바 있고(2008.5.28),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영 매체(國際先驅導報)(2009.3.30)를 통해 ‘아시아판 준(准)NATO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 및 ‘5자회담’의 구상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부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명함으로써 이들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중관계는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됨으로써,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교류를 외교·안보·국방영역으로 확대하고 고위급 차원의 대화 채널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상호호혜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략적

이익을 간과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점은 바로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통한 대북 설득과 압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이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신 중 호 (정치학 박사)
(788-4553, jonghos@nars.go.kr)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입니다.

※ 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